

## 공익광고협의회 규정

제정 2012. 8.22  
개정 2015.12.21 시행 2015.12.22  
개정 2019.12.24 시행 2019.12.27  
개정 2021.12.29 시행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광고 캠페인의 효율적인 운용과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공익광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광고”란 공사와 협의회가 주관하여 제작하는 공익성 캠페인 광고를 말한다.
2. “협의회”란 범국민성, 비영리성, 비정치(정책)성, 인간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익광고 주제선정 및 제작, 집행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광고계,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익광고 캠페인의 기본방향 및 주제선정에 관한 사항
2. 공익광고의 각 주제별 제작방향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사의 공익

사업 담당 임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과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편성 담당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를 제외한 외부위원은 전문가단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9>

②제1항의 전문가단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사람들 중에서 광고회사, 제작사, 언론사, 또는 이와 관련된 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밖에 공사 공익사업 관련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후보자들로 구성한다. 단, 감독부처 공무원과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전문가단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1. 대학, 공공연구기관에서 전임교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언론·시민사회단체 임직원으로서 5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광고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국내외 광고제 수상, 또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방송사 편성 관련 간부
5. 기타 공익광고에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각 계의 전문가로서 공사 공익사업 관련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제2항의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단,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공익사업 담당 임원으로 하며, 추천위원회에는 2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15.12.22>

④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 재직기간이 긴 위원,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공익광고 담당팀장(국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은 3년 이상 연속하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내부위원과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2.29>

②임기 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 <개정 2019.12.24.>

1. 심의 및 평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특정업체에 유·불리하게 점수를 채점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심의업무에 태만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촉 시 경력, 학력, 부패행위 전력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6. 협회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개인적인 비위행위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  
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무)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의 직무  
윤리 사전진단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  
척의 결정은 위원장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안건의 이해당사자  
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련한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  
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안건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당해 안전과 관련된 업체에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당해 공사가 발주하는 공익광고 관련 용역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④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⑥사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회의) ①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협의회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대면심의·의결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⑤공사의 사장 또는 위원장은 전문적 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제9조(소집 및 통지) ①공사는 회의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5일 전까지 안건의 관련당사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4.>

②공사는 회의종료 후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안건의 관련당사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보관 및 공개) ①협의회는 사안의 경과, 표결내용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되, 협의회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단, 비공개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비공개 의결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관계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참석) 협의회 구성위원 중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내부위원이 협의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결정사항 시행) 본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공사 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제11조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관장) 협의회 사무는 공익광고 담당부서에서 관장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1.>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4.>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9>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청렴서약서(제6조) <개정 2019.12.24.>

##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청렴서약서

직위 :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성명 :

[직무윤리 사전진단]

연번	진단내용	체크사항	
1	협의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협의회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협의회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특허 면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협의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협의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협의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 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서약서]

상기 본인은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 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하**

별지2. 위임장(제12조)

## 위임장

본인은 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으로서 금번 \_\_\_\_\_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_\_\_\_\_ 회의  
(20 . . )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합니다.

대리인 : 소 속  
성 명 (인)

위임인 : 소 속  
성 명 (인)

20 .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 귀하